

중국정부 중장기 경제정책의 주요내용 및 평가

- 2015년도 兩會 결과를 중심으로 -

- ◆ 중국은 3.3~15일중 개최된 兩會(全人大 + 政協)*에서 지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
 - ◆ 뉴노멀 시대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의 안정속의 발전(穩中求進)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·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의 質과 效益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강조
 - 이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① 안정적 성장 유지 ② 개혁 지속 ③ 민생 개선 등을 제시
 - 1 (안정 성장)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성장이 제반 문제 해결의 기초이자 관건(基礎和關鍵)임을 강조하며 뉴노멀하에 발전방식 전환(量→質)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필요
 - 내수 확대, 신성장전략 추진 등 성장레짐 전환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
 - 2 (구조 개혁) 시장의 역할 제고를 위한 시장화 개혁 및 대외개방이 지속 추진되고 국유기업 개혁도 가속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투명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나 이에 따른 가격변수의 시장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
 - 3 (민생 개선) 고용 확대를 사회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데다 소득불균형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강화될 전망
- ⇒ 중국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금년중 대체로 7% 내외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
- 다만 양대 정책목표인 성장과 구조조정의 단기적 상충 가능성, 디레버리징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단기적 불안요인 발생 및 시장변동성 확대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
 - 이와 함께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될 新실크로드,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+ 등 핵심 발전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이 긴요

I. 개 요

- 중국은 3.3~15일중 개최된 兩會(全人大 + 政協)*에서 지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

* 중국의 국가 중요사항은 헌법상 최고 의결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(全人大)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,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(政協)은 각계 정당·사회단체·소수민족·기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가 최고 정책 자문기구로 사회통합 기능에 주력(<참고 1> 참조)

- 금번 兩會는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과잉설비 및 부동산경기 부진 등과 같은 경기순환적 요인이 겹치면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하에 향후 경제정책기조 제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

⇒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兩會의 논의 내용*과 총리 기자회견(3.15일) 등을 통해 제시된 중국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

* 李총리 정부업무보고,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초안, 재정부 예산안, 인민은행 총재 및 재정부장 기자회견 등

II. 중장기 경제정책기조

- 5세대 지도부의 정책기조는 기존 성장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완전한 小康사회*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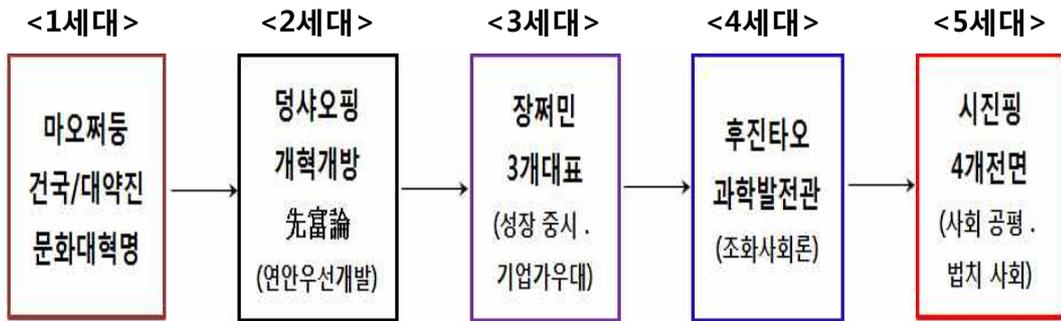
* 덩샤오핑의 3단계 국가발전론: 2000년 원바오(溫飽, 따뜻하고 배부른 빈곤해소 단계), 2020년 샤오강(小康, 중등생활의 중진국 단계), 2050년 따통(大同, 선진수준의 사회주의 이상사회). 시진핑 주석은 취임연설(2013.3.17)에서 2020년 샤오강 사회 실현을 천명한 바 있음

-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의 ‘4개 全面’을 정부업무보고 최종안에 포함* 시킴으로써 현 지도부의 통치이념으로 제시

* 당초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(3.5일)에는 덩샤오핑 이론, 장쩌민의 3개代表,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 만이 언급되었으나 전인대 논의과정중 4개 全面을 추가

- 4개 全面 : ① 전면적 小康사회라는 전략적 목표와 이를 위한 ② 전면적 개혁심화 ③ 전면적 依法治國 ④ 전면적 엄격한 黨관리(從嚴治黨) 등 세가지 수단으로 구성

역대 지도부별 정책패러다임 변화



- 또한 중국경제의 뉴노멀(신상태: 新常態) 진입을 공식 선언하고 합리적 수준의 성장속도와 경제구조조정·개혁 심화를 통해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 및 성장의 質과 效益 제고를 도모
 - 이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① 안정적 성장 유지 ② 개혁 지속 ③ 민생 개선 등을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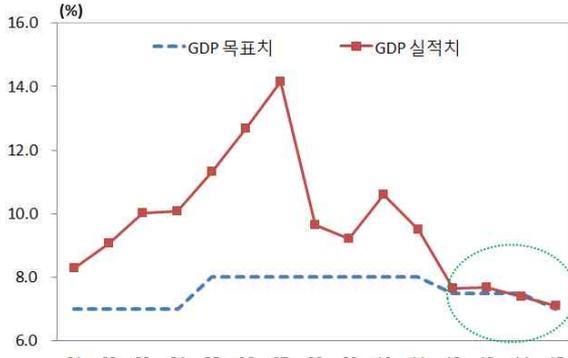
Ⅲ.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

1. 안정적 성장 유지

-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성장이 제반 문제 해결의 기초이자 관건(基礎和關鍵)임을 강조하며 뉴노멀하에 발전방식 전환(量→質)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필요
 - 중고속 성장, 중고급 수준을 목표(雙目標)로 안정적 정책과 기대, 구조조정과 개혁을 결합(雙結合)하고 창업과 혁신, 공공재·공공서비스 확대 등 양대 성장동력(雙引擎)을 강화하여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실현
 -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연간 목표를 고용안정, 잠재성장률 하락 등 필요성과 가능성(需要和可能)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0.5%p 낮은 7.0% 내외*로 하향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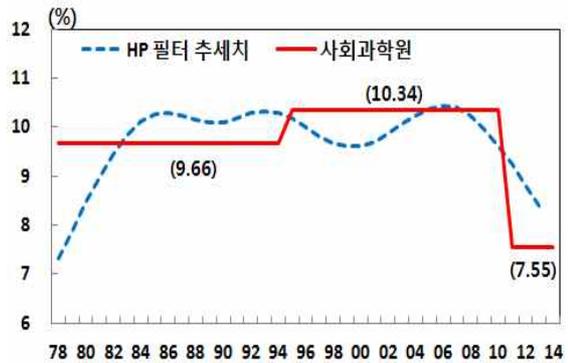
* 2004년 이후 7년(2005~11) 연속 8%를 유지(保八)해 오다가 2012년부터 7.5%로 하향 조정(七上八下)한 바 있으며 금년 7.0% 내외(保七)로 재차 하향 조정

GDP성장률 목표치 및 실적치



자료 : Wind, 2015년 실적은 전망치

잠재성장률



자료 : 사회과학원

- 또한 CPI상승률(3.5% → 3.0%) 및 M2증가율(13% → 12%)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투자 및 소비증가율도 각각 17.5% → 15.0%, 14.5% → 13.0%로 하향*

* 당사무소 현지정보 “2015년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평가” (2015.3.5) 참조

□ **李총리는 성장률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재정 및 통화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「소비 기초·투자 관전」 기조 하에 신형도시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 지속을 위한 내수의 성장 견인동력 강화 및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화를 표명**

-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화*하는 한편 통화정책은 안정적 기조하에 정책의 신축적 운용(松緊適度)을 강조하며 M2증가율 목표도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

*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2,700억위안 증가한 1조 6,200억위안으로 GDP대비 재정적자율은 2.3%로 전년대비 0.2%p 상향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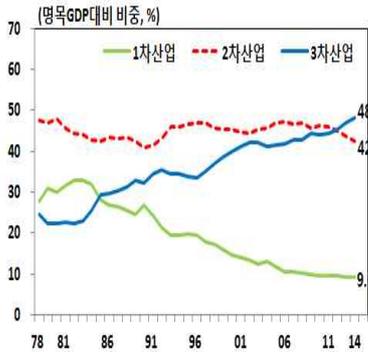
- 또한 내수 강화를 위해 소비를 기본(基礎作用, basic role)으로 투자를 관전(關鍵作用, key role)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메커니즘 구축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소비 증대 및 투자 최적화를 추구

- 이를 위해 SOC 관련 정부투자지출을 확대*하는 동시에 민관협력(PPP: Public Private Partnership)을 적극 활용하고 신형도시화 및 新실크로드 등 3대 국가전략**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

* 철도 투자지출 8,000억위안 이상, 수리공정 투자지출 8,000억위안 이상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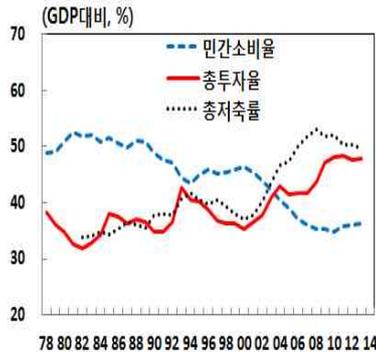
** 新실크로드(일대일로: 육상 실크로드 + 21세기 해상 실크로드), 징진지(京津冀) 공동발전(베이징·톈진·허베이 3개 지역 균형발전 전략), 장강경제벨트(長江經濟帶: 윈난에서 상하이까지 장강 유역의 동서지역 중국 최대 경제권)

산업별 GDP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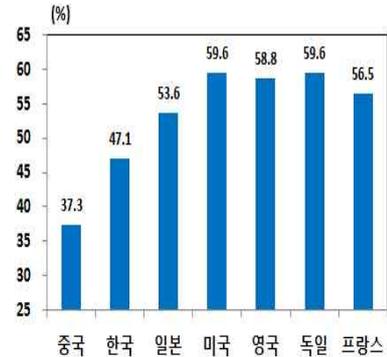
자료 : 국가통계국

총저축률, 총투자율 및 소비율



자료 : 국가통계국

주요국 민간소비율



주: 1인당 GDP 6~7천달러 시기 기준
자료 : World Bank

- 특히 신형도시화*는 투자수요 및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인간중심의 도시화(以人爲核心) 정책이며 新실크로드(중앙경제공작회의<14.12.11> 제시)**는 중국판 마샬플랜에 비견되며 현 지도부의 최대 핵심 개발전략으로 부각

* 3개 부문 1억명(三个1亿人) 목표: ① 1억명 농민공에 도시호적 부여, ② 1억명 거주 도시빈민촌 개조, ③ 1억명 중서부지역 도시화

** '중국의 新실크로드 전략 추진 현황과 평가' (6페이지) 참조

중국의 新실크로드 전략 추진 현황과 평가

- **(배 경)** 중국의 자본 수출국 전환*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중국몽(中國夢) 실현을 위한 핵심적 정책의 하나로 新실크로드 개발 전략을 적극 추진

*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(ODI)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4년 처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(FDI)를 상회(2014년 순 FDI 기준)

- 이와 같은 新실크로드 전략은 중국자본이 신흥국으로 대규모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직후 미국의 마셜플랜에 비견

- **(주요 내용)** 新실크로드(一帶一路, One Belt One Road) 전략은 육상 교통로(실크로드 경제지대, 一帶)와 해상교통로(21세기 해상실크로드, 一路)로 구성되며 이를 위한 실크로드펀드(絲路基金)*,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(AIIB) 설립 등 자금조달대책도 마련

* 新실크로드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 기구로 초기자본금 100억달러(인민은행 65억달러, 중국 투자공사 15억달러, 중국수출입은행 15억달러, 국가개발은행 5억달러)로 14.12.29일 베이징에 설립(초대 이사장으로 Jin Qi 인민은행 부총재보 선임)



- **(영향 및 전망)** 新실크로드 전략은 중국의 대내외적인 경제정책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영향이 매우 광범위할 것이며 향후 현 지도부의 최대 핵심 전략(전국 32개성 가운데 31개성이 금년 최대사업으로 제시)으로 부각될 전망

- 대내적 영향: 관련 SOC · 신규시장 개척 등 新성장동력 확보, 과잉투자 · 설비 · 공급(철강·화학·시멘트 등) 해소, 중국 서부지역 경제발전 등에 기여
- 대외적 영향: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, 외환보유액 투자 다변화, 위안화 국제화 및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에도 기여
- 향후 전망: 동 전략은 중국과 인접국 상호간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원활한 추진이 예상되나 대상국들의 기초 경제여건 취약, 미국의 견제 및 역내 지정학적 갈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2. 구조개혁 지속

□ 중국은 금번 전인대를 통해 중국경제의 새로운 정상상태(신창타이) 진입을 선언하고 이를 정확히 인식·적용·대응해 나가는 것이 향후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이에 부합하는 전면적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추진을 강조

① **(금융재정개혁)**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 금리자유화*와 환율 메커니즘 개선을 지속하고 민간 금융기관 설립, 자본시장 활성화** 등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정부 채무 등 금융리스크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

* 인민은행 Zhou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상반기중 도입 및 금리자유화(예금금리 상한선 폐지)의 금년중 도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

** 선강통(선전·홍콩 주식교차거래) 시행, 주식발행등록제 도입, 대출자산 증권화, 파생금융상품 시장 확대 등

■ 지방정부부채 관리를 위하여 신예산법(15.1월 시행)에 의거 자금조달을 지방채 발행으로 한정하고 사전 통제 및 사후관리를 엄격히 적용

· 금년중 지방정부에 대하여 만기도래 채무상환용 1조위안, 일반 공공 사업을 위한 적자재정용 0.5조위안 및 특별사업용 0.1조위안을 배정*

* 금년 만기도래 채무 1조 8,578억위안의 53.8%에 해당되며 지방별 만기도래 규모에 근거하여 배분. 일반 적자재정 채권은 1·3·5·7·10년물로 발행되며 단일 만기가 연간 총발행액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■ 정부의 예·결산 공개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앙의 지방 이전지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자원세 및 환경세를 도입

② **(산업구조개혁)** 인터넷+*, 신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 신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전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‘中國製造 2025’ 계획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

* 클라우드 컴퓨팅, 사물 인터넷(Internet of Things), 모바일 인터넷, 빅데이터 등 IT와 인터넷의 새로운 형태의 융합 발전을 의미하며 李克強 총리의 금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

○ 특히 기존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製造大國에서 製造強國으로 도약을 위한 ‘중국제조 2025(Made in China 2025)’는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 李克強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과제로 제시

「중국제조 2025」

구 분	주요 내용
<p>■ 목 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향후 30년내 세계 공업강국을 실현(중국제조 2050) - 첫 단계로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대열에 진입하고 2035년까지 독일과 일본을 추월
<p>■ 내 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25년까지 혁신 강화·스마트化·산업기반 구축·녹색 발전 등을 통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 ▶ 3대 과제: 제조 → 창조, 속도 → 품질, 제품 → 브랜드 (혁신, 친환경, 품질 경쟁력 제고, 서비스형) ▶ 국방·생활 등에 관련된 기초 제조·항공·선박·자동차·에너지 절약 등 전략적 산업을 우선 육성 ▶ 기존 제조업에 IT를 융합하여 디지털·네트워크·지능화 ▶ 과잉생산 해소, 시장원리에 입각한 M&A 지원 ▶ 2015년중 첨단장비, 정보네트워크, 집적회로, 신에너지, 신소재, 바이오 의약, 항공엔진, 가스터빈 등을 주도 산업으로 육성

③ **(대외개방)** 서비스업 및 일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(외국인투자 제한 품목 절반 축소)하여 해외자본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외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대외무역 시스템을 개혁

- 특히 외국인투자*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및 진입 이전 내국인 대우 등을 적극 추진

* 외국인투자제한항목을 79개 → 38개로 축소하고 4.1일부터 적용(발개위·상무부, 3.14일)

- 또한 新실크로드 등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간·지역간 자유 무역협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지대(FTZ)의 활용도를 제고

·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(시진핑주석 주재)는 기존 상하이 이외에 광둥, 텐진, 푸젠 등 3개 지역에 FTZ를 추가하는 방안을 심의·통과(14.3.24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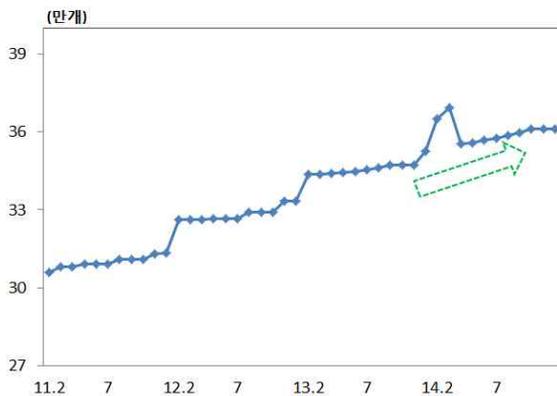
④ **(정부개혁)** 행정권한 축소,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가격개혁을 심화함으로써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의 역할 제고(정부 권력 빼기를 시장 활력 곱셈으로: 減法 → 乘法) 노력을 지속

-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2013년 416개, 2014년 246개의 행정심사항목을 폐지 또는 하부 이양*하였으며 금년에도 90여개 항목을 폐지 또는 하부 이양하는 한편 비행정심사항목의 경우 모두 폐지할 계획

* 리커창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(13.3.17)에서 향후 5년간 1,700여개의 행정심사인가 항목을 2/3로 축소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으며 금번 기자회견(3.15일)에서도 동 조치에 따른 신규 등록 기업체수 증가 등 개혁 보너스(紅利) 효과를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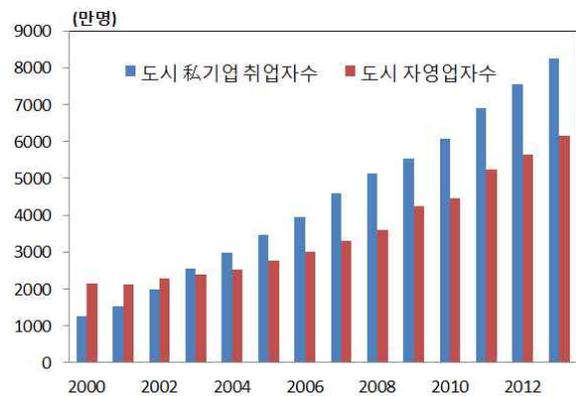
- 상업업무(商事)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기업 등록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고 三證合一(사업영업증·사업체번호증·세무등기증을 하나로)을 추진

광공업 등록 기업체수



자료 : 국가통계국

도시 私기업 취업자수 및 자영업자수



자료 : 국가통계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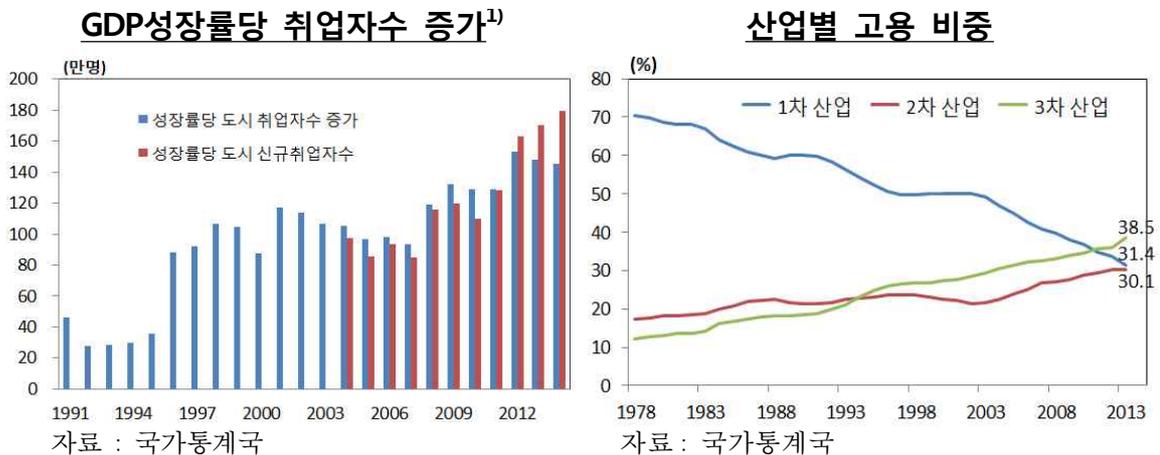
- 또한 정부의 가격책정 종류 및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경쟁조건을 갖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원칙적으로 자율화함으로써 의약품, 공공 서비스 및 전기·가스 등 자원성 품목의 가격결정권을 시장으로 이전

3. 민생 개선

□ 중국정부는 사회 평등과 조화로운 발전, 삶의 질 향상을 위한 **고용 안정**,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**소득분배 개선** 및 **환경오염 개선** 노력 지속을 강조

① **(고용 안정)** 경제성장률 등 주요 거시경제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민생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도시 신규고용(1,000만명 이상), 도시 실업률(4.5%이하) 목표는 전년 수준을 유지

■ 특히 서비스업 비중 확대 등으로 GDP 단위 성장률당 고용유발 효과가 증대되었음을 확인하며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률 둔화가 고용 및 주민소득에 영향을 줄 경우 정책적 대응을 확대할 것임을 강조



② **(환경오염 개선)**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재확인(民生之患, 民心之痛)하고 에너지소비효율 제고(3.1% 이상) 및 이산화황(3% 내외) 등 주요 오염물질 감축을 추진하며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시행 등 감시·감독 기능을 강화

■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(3.15일)을 통해 환경오염 개선을 예년과 달리 정부업무보고중 금년도 경제사회발전 목표의 서두에 제시한 점을 환기시키며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임을 강조

■ 구체적으로 생태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등 생태환경 개선 계획을 실시하고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및 탄소배출권 거래의 시범실시를 추진

· 아울러 2005년말 이전 등록 영업용 대량 오염배출 차량 전체를 폐차하는 한편 경작지의 산림·초지 복원 규모를 확대(33.4만헥타르→66.7만헥타르)하고 600만 헥타르 규모의 산림 조립을 추진

- ③ (소득분배 개선) 농촌 토지제도 개선,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 향상 및 양로보험 전국 통합운용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, 주거·교육 등 공공부문 지출을 확대

소득 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

구 분	주 요 내 용
■ 소득 분배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집체소유 농지 시장화, 농지사용권 대출담보 허용 등 농촌토지제도 개혁 ▶ 농민공 직업 교육 등 저소득층 취업 지원 및 창업 교육 강화 ▶ 농산물 가격보장시스템 지속, 중앙 예산중 三農 투자 확대 ▶ 도시 호적인구 비율 확대(2014년 36.7%→37.9%) 통한 농민공 시민화 제고 ▶ 영세·소기업 지원 강화 등 저소득층 소득 향상 ▶ 주민 기초연금 표준 55위안 → 70위안으로 인상 ▶ 노동자권의 법적기반 확보 및 노동분쟁 처리 메커니즘 개선 ▶ 최저임금제도 등 근로자 임금체계 개선
■ 사회안전망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보험) 양로보험(국민연금) 전국 통합운용 및 지급표준 10% 인상 실업·산재보험 보험료율 인하 및 연금·보험제도 개선 ▶ (의료) 기본의료 보장기준 상향 : 1인당 연간 320위안 → 380위안 응급구조 등 질병구제 제도 강화, 공립병원 개혁 시범지역 확대 ▶ (주택) 보장성 주택 착공 목표 확대 : 2014년 700만채 → 740만채 낙후지역 주택보조금 및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▶ (교육) 농민공 동반자녀 의무교육 보장 등 교육기회 평등 제고 중서부·낙후 지역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발전 촉진 대학입시 가산점 제도 폐지 등 지역별 형평성 논란 해소

IV. 평가 및 전망

□ 전반적으로 뉴노멀 시대 **중고속 성장으로 전환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**하는 한편 기존의 **안정속의 발전(穩中求進) 정책기조를 유지**하는 가운데 개혁·구조조정을 통한 **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의 확충**을 강조

① **(안정적 성장)** 내수 확대, 신성장전략 추진 등 성장레짐 전환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시행될 전망

■ 리커창 총리는 한동안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 경기 둔화시 이에 대응할 정책여력이 충분함을 강조(3.15일)

■ 시장참가자들은 정부의 고용안정 의지, 정책여력 등을 감안할 때 1분기를 저점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上底下高형을 보이며 연간 목표치(7% 내외)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
② **(구조 개혁)** 시장의 역할 제고를 위한 시장화 개혁 및 대외개방이 지속 추진되고 국유기업 개혁도 가속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투명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나 가격변수의 시장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

■ 리커창 총리는 안정적 성장과 구조 개혁을 두개의 눈(兩只眼)으로 비유하며 뉴노멀하 경제운용의 핵심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경제구조조정 간의 균형점(平衡點)을 찾는 데 있다고 설명(3.15일)

■ 경제전문가들은 개혁 추진에 따른 개혁 보너스(改革紅利)가 성장의 최대 동력으로 이를 통한 혁신과 창업이 사회활력과 경제성장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*

* 경제학자 100人대상 설문조사 결과 경제성장의 최대 동력은 개혁(79%), 혁신(62%), 정부권한 축소(59%), 요소투입(50%) 등의 순으로 나타남(中國經濟時報, 3.12일)

③ **(민생 개선)** 고용 확대를 사회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데다 소득불균형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강화될 전망

-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시 합리적 수준의 성장률 여부를 고용* 및 소득증가 상황으로 판단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정책대응을 재차 강조(3.15일)

* 2014년중 도시 신규취업자수는 1,322만명으로 연간 목표(1,000만명)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취업자수 증가(순증) 규모도 1,070만명에 달했음. 한편 금년도 신규 취업자수 목표는 전년과 같은 1,000만명으로 제시

-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하여 향후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응*이 예상되며 이는 산업구조조정 가속화의 계기로 작용될 전망

* 리커창 총리는 스모그 등 오염에 대한 선진포고(2014년 정부업무보고시)를 상기시키며 목표 달성 이전에는 결코 휴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환경보호법은 숨방망이가 아니라 필살의 무기(不是棉花棒,是殺手鐮)로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

⇒ 중국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금년중 대체로 7% 내외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

- 다만 양대 정책목표인 성장과 구조조정의 단기적 상충 가능성, 디레버리징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단기적 불안요인 발생 및 시장변동성 확대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
- 이와 함께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될 新실크로드,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+ 등 핵심 발전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이 긴급

<참고 1>

중국의 국가권력 구조 및 兩會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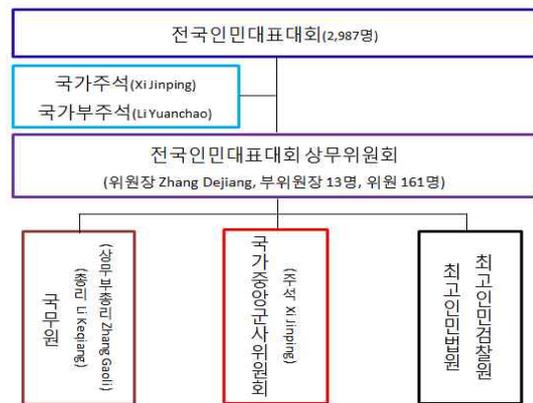
- 중국은 매년 3월 兩會(全人大 + 政協)에서 지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·결정
 -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전인대(立法), 정협, 국무원(行政), 軍을 장악하고 국가를 통치하고 있으나, 국가 중요사항은 헌법상 최고 의결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(全人大)를 통해 최종 결정
 -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(4中全會, 14.10월) , 중앙경제공작회의(14.12월) 등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논의하고 확정
 -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(政協)은 각계 정당·사회단체·소수민족·기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가 최고 정책 자문기구로 사회통합 기능에 주력

중국 공산당 지배 구조



자료 :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(美)

중국의 국가권력 구조



자료 : 언론 등 각종 자료 종합

兩會(全人大 및 政協) 개요

全國人民代表大會(全人大)	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(政協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 ▶ 각 지역별 대표 및 軍·소수민족 대표 등으로 구성(現 제12기 전인대 대표는 2,987명) ▶ 연 1회 전체회의 개최 ▶ 헌법개정·법률제정, 국가주석 등 국가지도부 선출,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수립, 국가 예·결산 심의·비준, 특별 행정구 설치 등 국가 중대 사항 토론·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가 최고 정책 자문기구 ▶ 공산당 등 중국의 정당·사회 단체·소수민족·기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(現 제12기 정협 대표는 2,237명) ▶ 연 1회 전체회의 개최 ▶ 홍콩·마카오·대만 및 소수민족 문제, 해외 화교업무 등을 관장하며 중국내 소수정파와 종교문제를 통할하는 등 사회통합 기능에 주력